

국회 긴급토론회

성소수자를 식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슬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땡땡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사회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

발표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소수자 학생
혐오표현 피해 사례
분석과 교육부의 역할**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땡땡 이사장

토론

이호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공동연구원,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윤아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교육부

섭의 중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동, 한국성소수자인
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프로그램

사회 : 권순부 무지개행동 사무국장

발표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성소수자 학생 혐오표현 피해 사례 분석과 교육부의 역할 :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
원센터 평동 이사장

토론

이호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공
동연구원/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윤아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난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활동가)

[축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성소수자 학생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분석과 교육부의 역할」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주최 측과, 발제를 맡아 주신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땡동'의 정민석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최종안을 검토한 전문가 일곱 분 중 여섯 분이 반발해 검토진에서 이름을 뺐지만, 결정은 되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땡동이 조사한 설문지 청소년 성소수자 189명의 응답을 보면, 44.9%가 교사로부터, 95.8%가 또래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항의도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앓아야" 했습니다.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북은 바로 이 청소년들을 혐오로부터 지키기 위해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서 이들을 지운 것은,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재검토가 아니라 원상 복구입니다.

혐오를 방치하는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가 누군가에게는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경계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소리가 교육부의 결정을 바로잡는 힘이 되도록, 저 역시 국회에서 제 몫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청소년들과, 그 목소리를 지켜 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축사]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함께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등,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관계자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진보당 손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혐오·차별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제외하고, ‘성소수자’, ‘커밍아웃’ 등의 설명과 관련 사례도 삭제됐습니다. 감수한 검토위원 7인 중 6인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자문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은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모두는 귀하고 존엄하며,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월, 그 누구도 존재 자체로 차별받지 않고 모두의 존엄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특정 계층에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이유로 배제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평등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 역시 교육부 가이드북의 문구 몇 개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이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모든 학생들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과 변화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구체적인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학교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고견에 귀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은 의정활동을 통해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



[축사]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부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과 면담에 이어 오늘 국회 토론회까지 빠르게 준비해 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명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님과 오늘 발표와 토론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실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졌고, 그 이유가 ‘성소수자 반대 민원’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민원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지운 것입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예외로 두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입니다. 교육부가 만들고 있던 것이 과연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가이드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용인해도 된다는 ‘가이드’를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르니까. 누군가를 배제하라는 목소리가 클수록 국가는 더 분명하게 그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안과 밖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71.1%는 교사에게, 87.0%는 또래에게 혐오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우팅이나 물리적 폭력 등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도 60%가 넘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심리적 위기 역시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전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의 39.1%가 지난 1년간 자살 및 자해 시도를 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5.1%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비 성소수자 청소년보다 다섯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살 위험은 비 성소수자 인구보다 8.5배나 높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현장에서도 자해·자살 위기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혐오와 차별은 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학교와 교육부 그리고 국가가 성소수자 학생을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지운다는 것은 성소수자 학생에게 “네가 겪는 혐오는 국가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과 다

르지 않습니다. 교사에게는 성소수자 혐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필요한 기준을 주지 않고, 학교에는 이를 외면할 핑계를 만들어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온전히 복원해야 합니다. 왜, 누구의 판단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그 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다시는 민원이나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특정한 학생들을 인권정책에서 지우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은 개별 부처의 대응만으로는 혐오와 차별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분명한 차별금지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인 청소년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말을 2026년까지도 해야 한다는 현실에 비통함과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제대로 복원되고, 모든 청소년이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 목소리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발표1]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

교육부에서 일명 ‘고교야구 스타벅스 사태’ 이후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었다. 책자 형태의 이 가이드북은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협의하였고 2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쓰이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내용은 이미 앞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던 서울시교육청의 준비 내용을 교육부가 수정·추가하여 제작할 방침이었다.¹⁾

해당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교육부는 7인의 검토위원을 추천받아 급한 일정으로 감수를 요청하였다. 검토위원들은 다급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을 제출하였고 특히 다수의 위원들이 성소수자 관련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소수의 언급이 있던 부분까지 추가로 삭제된 채 최종본이라 통보해 왔다. 이에 검토위원 중 일부는 인권시민사회단체에 이 문제를 알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4개 단체²⁾에서 공론화를 시작하였다. 언론보도가 시작되고, 빠르게 기자회견도 진행되었다.³⁾⁴⁾

교육부는 언론 취재에 대한 답변과 지난 8월 31일 있었던 담당과, 민주시민교육과와 4개 단체 면담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도교육청 의견조회를 해보니 다수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반대 민원 등으로 학교현장 배포가 어려워진다고 반대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들어가기 어렵다. 셋째, 당시 시점으로 가이드북 제작은 중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제작에 들어가겠다.

이에 대해 본 발표에서는 교육부의 입장과 그간의 진행 과정의 문제를 짚어보고, 최종본으로 회람되었던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내용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가이드북 수정 방향을 제안한다.

1. 경과와 교육부의 입장의 문제

- 1) [단독] 배재고 논란에... 2학기부터 ‘혐오 대응 가이드북’ 전국 배포, 2026. 7. 31. 서울신문, 김가현 기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education-news/2026/07/31/20260731008007>.
-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지원센터 평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3) [단독] 차별 막자면서...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뺀 교육부, 2026. 8. 28. 박정연 기자,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5063.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60909.
- 4) ‘혐오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뺀 교육부...132개 단체 "즉각 복원해야", 2026. 9. 1. 박상혁 기자,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0114213385073>.

1)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과정의 문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민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이유로 설명한다. 그러나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를 종합해보면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 적절한 의견수렴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⁵⁾⁶⁾

공식 공문을 통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을 통하였으며, 기한은 단 하루였다. 전체 가이드북 원고에 대한 검토의견도 아니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용어 사용에 대한 의견조회로 한정되었다. 시도교육청의 반대의견이 다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적절한 절차와 소요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서 의견을 다시 제출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또한 전체적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유에 대해서만 포함 여부를 질의한 것 역시 다분히 의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된 이 과정을 두고 ‘시도교육청 다수가 반대했음’을 내용상 성소수자 관련 내용 포함 불가의 근거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불어 진행순서상 시도교육청의 의견으로 인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해명은 성립할 수 없다. 이미 8월 6일, 검토위원들에게 발송된 원고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마련했던 내용에는 다수 포함되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관련 사례들이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다. 그렇기에 당시에는 서울시교육청 초안의 존재를 몰랐던 검토위원들이 현재 내용으로는 의도와 무관하게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한 것은 8월 18일 전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 의견을 근거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2) 민원이 예상되어 넣지 않았다는 답변

교육부는 반대민원이 우려되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고 해명한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대민원이 바로 이 가이드북이 예방하고 대응하자고 제안하는 혐오이며 차별이다. 아직 제기되지도 않았기에 앞선 사건들로 추측하자면 반대민원의 주된 근거는 이러한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보호해야할 특성으로 언급하는 그 자체를 젠더이념 주입이라거나 청소년들의 성혁명을 부추긴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지난 몇 년간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 수천권이 사라졌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듯 학교안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차별의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민원을 이유로 실재하는 피해와 의견은 묵살한 채 성소수자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언급조차 못하는 가이드북이라면 본래 취지가 무색하다.

5) [단독] 울산교육청 "성소수자 내용 넣어라"... 교육부 답변 유도 의혹도, 2026. 8. 31. 윤근혁 기자, 오마이뉴스, <https://omn.kr/2jmlc>.

6) [단독]서울교육청 ‘성소수자’ 내용 복원 추진...교육부 ‘허술한 의견수렴’도 도마, 2026. 9. 8. 김지혜 기자, 우혜림 기자,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06161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을 시도하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교사들이야말로 혐오와 차별을 앞세운 반대 민원 앞에 위태롭다.

3)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답변

위 민원 우려를 이야기하며 교육부는 지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언급하였다. 지난 2022년, 교육부의 교육과정 공청회 과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이 장면이 다른 사안도 아닌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교현장을 주목하고 있는 혐오선동세력이 성소수자, 성평등을 어떻게 왜곡하고 차별을 선동하는지 목격한 이 현장은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를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다.⁷⁾

이미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동으로 『우리 학교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들이 담겨있다. 심지어 교육부의 가이드북은 서문에서 이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가 발간하는 자료에서 특정 단어를 언급할 수 없다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2. 내용상의 문제

아래 내용은 원고 작성 배경에 따라 다른 견해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필요성과 근거를 제시한 검토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가 ‘민원이 우려되고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및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혐오표현의 정의와 본문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1) 혐오표현을 다루면서 차별의 구조와 대상을 말하지 않는 가이드북

가이드북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표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교육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료라고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은 통상의 모욕, 공격적 발언과 구분된다. 그러나 가이드북은 일반적인 모욕이나 공격적 표현과 혐오표현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 혐오표현이란 개념의 등장 배경을 고려할 때, 역사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온 집단을 향한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생략될 때, 혐오표현과 대항표현의 구분도 어려워진다. 가이드북은 혐오·차별표현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이유로 모욕하거나 비하하고, 차별과 배제, 적대감

7) 전학연 “청소년 ‘성혁명’ 부추기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안 전면 폐기해야”, 2022. 10. 12. 양연희 기자, 펜앤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7670>.

이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특성이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특성이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만으로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기보다 누군가의 개인적 특성을 소재로 불쾌하게 하거나 공격하는 모든 표현을 가리키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풍부한 사례의 필요성

혐오·차별표현의 예방과 대응, 특히 아직 사회적으로 개념과 대응방안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려는 취지라면 그 무엇보다 적용 사례가 풍부하게 들어가야 한다.

가이드북의 사례 구성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차별표현의 다양한 양상을 충분히 보여주기에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제시된 사례는 장애학생에 대한 조롱, 역사적 사건과 피해의 희화화, 성별·가족을 비하하는 욕설, 경제적 상황과 가족형태에 관한 낙인, 교사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낙인,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배제를 다루고 있다. 각각 필요한 사례다. 부족한 지점은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처럼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혐오·차별표현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은 중대한 공백이다. 학교에서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비하하는 유행어와 밈의 사용, 성별규범에서 벗어난다고 여겨지는 학생에 대한 조롱, 성소수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정체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아웃팅, 성소수자 인권교육이나 관련 수업을 둘러싼 혐오표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정체성을 공개한 성소수자 학생뿐 아니라 말투·외모·옷차림·행동이 지배적인 성별규범과 다르다고 인식되는 모든 학생을 표적으로 삼는다. 검토 과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실태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최종본은 이를 사례에서 완전히 제외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의 중대한 혐오·차별 문제를 다시 비가시화하고, 교직원에게 이를 인식하고 대응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3) 철저한 삭제의 과정

검토위원들이 자문을 위하여 받았던 원고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관련 단어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체크리스트, 참고자료에 몇 단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토의견으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에 있던 ‘성적지향’마저도 삭제되었다. 풍부한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례는 5개에서 6개로 추가되었지만 성소수자 관련 사례는 아니었다.

검토위원들이 처음 받은 원고와 최종본 사이의 수정사항 가운데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참고자료 목록 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동성애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유네스코 가이드북』, 2013.”에 삭제를 의미하는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이다. 마땅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최종 누락되게 된 것은 물론 많은 문헌 목록 중 유일하게 이 자료에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미처 지우지 못하고 회람된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집과정은 성안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현재와 같은 짧은 분량만으로 혐오표현의 개념과 사례, 대응지침 및 점검표를 충분히 담기는 어렵다는 점도 덧붙인다.

3. 수정제안

그간의 진행과정과 진단된 문제점을 토대로 최소한 다음의 내용이 혐오·차별대응가이드북 수정본에 반영되어야 한다.

1) 본문에서 혐오표현의 정의와 관련한 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명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 않은 혐오표현의 개념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직 국내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 사유가 언급되는 정의규정은 필요하다. 오히려 사유 없이 규정되는 정의조항은 가이드북에서도 구분하고자 하는 불쾌한 표현과의 차이를 알기 어렵게 한다. 사유의 나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사유의 나열과 비슷한 정도로 풍부한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논란 이후 발간되는 내용 이기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반복되어 언급되었지만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은 69%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이드북 제작 담당자들이 반드시 유념하여야 한다.

2) <사례로 살펴보는 혐오·차별 표현의 이해와 대응>에 성소수자 관련 사례 추가

가이드북 성격의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교육부가 원고 작성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혐오표현대응 가이드라인 자료에서도 성적지향과 관련한 사례가 담겨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해서도 사례 부분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여러 조사 결과와 심층 취재가 축적되어 있으며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에서 발표할 자료에도 참고할 실제 사례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3) <학교급별 혐오·차별 표현 자기 점검표>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명시

가이드북은 <부록>으로 학교급별 혐오차별표현 자기점검표를 담았다. 해당 내용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가체크를 해볼 수 있는 여러 내용을 제시한다. 여기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게이같다"라는 표현 등 성소수자와 관련한 표현이 욕설이나 비하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은 실태조사,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행동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로 포함해야 한다.

세 가지 제안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북의 취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수정 방향이다. 더 풍부한 내용이 담겨야 하지만 여기에서 최소한의 사항만 제안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모든 단위가 한마음으로 가이드북의 조속한 제작과 현장 배포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교육부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는 공론화된 시점에서 제작을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완성한 뒤 발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북은 발간되어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되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에 함께 대응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가이드북이라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절실하다. 이어지는 발표와 토론 역시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 가이드북이 가야할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 교육부의 조속한 수정과 제작을 촉구한다.

[발표 2]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평동 이사장

성소수자 학생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 분석과 교육부의 역할

정민석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이사장)

지난 8월 28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배포할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참고했던 서울시교육청 초안에는 혐오·차별을 정의하는 기준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었고,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학교 대응 지침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지만, 교육부 '가이드북'에서는 삭제되었고, 이 같은 결정에 문제 제기한 검토진의 의견마저 무시되었다.

교육부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반대 의견과 민원 제기에 대한 우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현재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차별 표현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성소수자 학생의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되었다. 혐오·차별 표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성소수자'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단순히 특정 단어가 사라진 문제가 아니다. 차별과 혐오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소수자 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교육계가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평동은 언론 보도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차별 표현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교실에 만연해 있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표현이 무엇인지 알리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긴급하게 모아 교육부 등에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본 조사⁸⁾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일 동안 평동 SNS,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진행되었고,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거나 탈학교 한 청소년 성소수자(2008년생까지)를 참여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정보로 이름(닉네임), 출생 연도,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정체성·성적지향, 학교 재학 여부, 지역 등을 물었고, ▲교사로부터 경험한 혐오 표현, ▲또래 친구로부터 경험한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을 경험한 이후의 감정과 상태,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교육부(교육청)에 요구하는 개선책을 상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의 자기 보고식 자료이고, 성소수자가 삭제된 '가이드북'이 배포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긴급하게 진행되

8) 긴급!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혐오 표현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https://forms.gle/isUB9HGtWM66ocWp8>

었다는 점에서 조사 참여자가 전체 청소년 성소수자 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 다만, 응답자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경험을 작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소수자 혐오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에는 총 189명이 응답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생이 49명(25.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뒤이어 2008년생 40명(21.1%), 2010년생 37명(19.6%) 순으로 많았다. 2012년생 이하도 28명(14.8%)이 응답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재학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약 89.9%(170명)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약 10.1%(19명)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개 시도 전 지역에서 응답했으며, 경기(58명, 30.7%), 서울(36명, 19.0%), 인천(23명, 12.2%) 순으로 많이 참여했고, 수도권 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경남이 21명, 광주·전남이 8명 순이었다.

성소수자 학생 혐오·차별 표현 피해 경험 사례들

혐오·차별 표현 피해 경험은 교사와 또래 친구로 나눠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혐오·차별 표현을 경험한 이후 어떤 감정과 상태에 놓였는지, 혐오 표현에 대응한 경험 이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 85명(약 44.9%)은 교사로부터, 181명(약 95.8%)은 또래 친구로부터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는 학교에서 어떤 형태로 혐오 표현을 경험했는지 그 현황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1) 일상적인 욕설이 되어버린 성소수자 정체성

동성애자를 농담으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봐... 구체적으로 적을 만큼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일상이 되어서...

'너 레즈야?'라고 장난처럼 묻거나 게이를 욕으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 하는 거 게이야.', '누구 게이 같다', '게이 같은 소리 좀 하지마.', '너 이러는 거 진짜 게이 같아.', '재 게이임'

평소에 하도 자주 듣고 살아서 일일이 적으면 끝도 없어요. 일단 남자애들은 항상 게이라는 표현을 욕으로 쓰고요. 여자애들도 막 '나 예전에 실제로 레즈 본 적 있다? 좀 신기했음. 근데 크게 간섭하진 않겠지만 난 레즈랑은 친구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레즈가 무슨 괴물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요.

게이 같다는 욕처럼 쓰는 정도..

'트젠은 전부 성범죄자다.' '내 성별은 크레파스야.' 등 젠더퀴어에 대한 수위 높은 혐오표현을 자주 접함.

‘나는 헬리콥터니까 전용 화장실을 지워줘라’ 등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정체성을 조롱하는 표현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게이', '레즈'와 같이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청소년들의 경험에서는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어떤 응답자는 농담에 기댄 혐오가 너무 일상적이다 보니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할지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고, 평소 (혐오 표현을) 자주 듣고 있어 일일이 적으면 끝도 없다고 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누구 게이 같다’, ‘게이 같은 소리 좀 하지마’와 같이 비하의 의미가 담긴 표현을 자주 듣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즉, ‘게이’와 같은 단어가 성소수자를 부르는 정체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낮추거나 조롱, 비하하기 위한 표현으로 학생이나 교사들 사이에서 소비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욕설로 반복해서 사용되면, 성소수자 학생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끔 하게 하고, 성소수자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성소수자를 조롱과 비하의 대상으로 여겨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더 문제인 것은 학교에서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욕설처럼 사용하는 문화가 방치된다면, 혐오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문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혐오·차별 표현이 노골적인 적대감을 일으키는 형태로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농담', '장난', '웃자고 한 말'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응답자는 또래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을 웃음거리처럼 사용하는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 사이에서 성소수자 관련 표현이 자연스럽게 욕처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끼리 하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학생에게 이러한 환경은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2)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들 : '더럽다', '역겹다', '정신병이다'

'존중은 하는데 내 눈에만 안 띄면 좋겠어', '정신병 아니야?' '더러워'
트랜스여성 유명인을 언급하며 '더럽다', '왜 그렇게 사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 게이 죽어라'. '역겹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그 이야기에 단체로 웃음을 터트림
'동성애자들은 모두 병원에 가둬야 한다.', '성별은 두 개이며 그 외는 모두 정신병'
'그럴 거면 정신병원을 가든가'
'동성애자 너무 더럽다, 무섭다.'
'그냥 역하다. 나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존중한다.' 등의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여러 차례 접함.

친해진 친구에게 트랜스젠더로서 학교생활을 하며 생긴 고충을 털어놓고자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바로 앞에 대고 "난 교회 다녀서 너 같은 새끼들 다 역겨워 싫어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애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다'

성소수자를 '더러운 사람', '역겨운 사람' '정신병자'처럼 표현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표현은 성소수자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병리화하고 부정하는 것으로써 이들을 고쳐야 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다. 한 응답자는 친구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야기한 뒤 'X 더러운 새끼'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내가 잘못 태어났나?, 난 정말로 정신병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혐오 표현의 영향이 일시적인 불쾌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3) 아웃팅과 소문 : 혐오가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

혐오 표현이 아웃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자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결정권이 쉽게 침해되기도 한다. 한 응답자는 커밍아웃 이후 더럽고 역겹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친구가 아웃팅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의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의 관계까지 잃었다고 하였다. 아웃팅 경험 이후 "세상이 이렇게 정체성 하나만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좌절했고 트라우마 비스름하게 남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중학생 때 내 지향성을 마음대로 추측하고 레즈는 역겹다면서 달기만 해도 더럽다는 듯이 피하던 친구, 내가 유일하게 커밍아웃했던 친구가 '애는 여자 좋아하잖아'라고 다른 친구한테 아웃팅했습니다.
저랑 친구를 레즈비언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그 친구랑 손절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들에서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실제로 소문이 퍼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웃팅의 문제는 단순히 '소문이 퍼졌다'라는 데 있지 않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소문이 퍼지면 친구 관계가 끊어지거나,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거나, 자신을 향한 혐오 표현에 도움을 요청받기도 어려워진다. 결국, 아웃팅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공개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고,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 '가이드북' 제작에 참고가 된 서울시교육청 자료 '모두의 존엄과 포용 함께 만드는 인권친화학교'에는 혐오 표현 피해 사례로서 '성적 지향에 관한 소문과 정보 유포

가 집단적 배제로 이어진 경우'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혐오 표현이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학교생활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가이드북'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소문 전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과 관련된 사생활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이른바 '아웃팅')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기피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정보의 추가 확산을 즉시 차단하고, 피해 학생의 안전과 심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실제 성적 지향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유포 경위와 범위, 기피·배제 행동, 반복성과 확산 정도,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여 추가적인 아웃팅과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4) 교사에 의한 혐오·차별 표현이 갖는 더 큰 문제

혐오·차별 표현 피해는 또래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자의 약 44.9%는 교사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위가 다르고, 교사가 하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은 때론 학교가 허용하는 규범처럼 느끼게 할 수 있어 또래 학생들의 혐오 표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진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로부터 혐오 표현을 들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작성해 준 내용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동성애'다. 이는 성소수자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성애를 '비정상', '질병', '자연스럽지 않은 것' 등과 연결지어 혐오적 표현을 거리낌없이 했다는 것이다. 교사가 성소수자를 웃음거리로 만들기도 하는데, 농담처럼 그냥 지나간 말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겐 '해도 되는 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

동성끼리 연애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순리를 거부하는 거다, 징그럽다,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토나온다.

과학 선생님이 수업 중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하심. 보건 선생님이 에이즈는 게이들한테서 많이 걸린다고 성교육 중 발언하였음.

교사는 교실에 마치 성소수자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발언하기도 하고, 수업 중에도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자신의 종교관을 드러내며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교사도 있었고, 용기를 내 커밍아웃을 했지만, 청소년기 일시적으로 겪는 문제로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였다. 한 응답자는 도덕 시간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교사가 '시대가 잘못됐다,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냐.'라는 말을 들었다 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보건 수업에서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의 주원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과학 시간에 동성애자에 대한 과거 치료 사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뇌에 구멍을 내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고 한 응답자도 있었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지목하지 않을지라도, '성소수자는 이상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된다면, 성소수자 학생은 학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 응답자는 교사의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하며 보인 표정으로 인해 더 큰 상처가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교사의 혐오 표현을 듣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을 한 이들도 있었다.

동성애에 대한 주제가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질책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하시면서 몸서리치셨다. 그 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내내 당부하셨다. 듣는 내내 가슴이 콩닥거렸다. 평소에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이어서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더 믿기지 않았다.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그 말을 하면서 지으신 표정이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혐오.차별 표현은 때론 단순한 조롱과 비하를 넘어 '죽여버리겠다.'라는 표현을 들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표현이 물리적 위협(괴롭힘이나 폭력)과 결합하는 순간, 학생이 느끼는 공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내버려뒀을 때 피해 학생은 도움을 요청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 표현 피해 경험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

응답자의 약 98.4%는 혐오 표현 이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했다. 이는 단순히 '불쾌한 말을 들은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응답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였다. 또한, '커밍아웃을 포기하거나 숨기게 되고', '또래 관계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거나 자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속상한 마음이 가장 컸고, 이후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기분이 나빴고... 이상한 아이 취급받는 것 같아 속상했다."

"내가 징그러운 사람이 된 것 같았음."

"혼자 괜히 거리를 두게 되었고 괜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듯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소속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자주 합니다."

"커밍아웃도 못 하고 지정 성별로 불리며 왕따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하는 내 자신"

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지독한 고립감과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을 느꼈고 단 한 순간이라도 그곳에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더는 맞물리지 않고 어긋나는 감각에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한다고 아무나 좋아하는 게 아닌데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면 친구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비수처럼 꽂혀서 며칠을 학교에 가지 않았고, 친구들에게 아니라고 해명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죽고 싶고 울고 싶고 그냥 학교에 성소수자인 선생님 딱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양성애자이면 안됐구나, 난 진짜 이성애자이고 헛갈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 세상은 이성애자 편만 드는구나 싶어서 그냥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곧 '내가 존재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하며 자기 인식을 흔들리게 하고, 충격·분노·슬픔이라는 다양한 감정들이 커져이 쌓이게 만든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자기검열 행동이 잦아지고, 그 결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차라리 고립을 선택하게끔 한다.

어떤 응답자는 학교 다니기가 무섭다고 표현하기도 했고, 성소수자라는 사실 때문에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경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응답들은 혐오 표현이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제대로 된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혐오 표현이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제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거짓없는 저의 정체성대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음.”

“학교 다니기 무서워졌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친구는 다 잃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혐오 표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성소수자 학생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 응답자 중 5.2%만이 대응한 경험이 없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나머지 응답자 역시 대다수 '견디고', '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변했다.

“아무 말 없이 견딤.”

“그냥 견뎌요.”

“그냥 참는다.”

“없어요. 그냥 혼자 속으로 앓아야 해요.”

“속마음을 애써 누르고 서러운 마음을 꼭 참고서 넘겨요.”

일부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담교사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지는 않았다. 한 응답자는 부모에게 커밍아웃하는 문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교사로부터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으로 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사에게 자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린 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후 소문이 퍼졌다고 했다.

교육부에 요구한다. :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목소리

이번 조사를 통해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혐오·차별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욕설로 사용하는 혐오 문화가 이미 일상화되었고,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으로 바라보거나 병리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 표현들이 수업 중에도, 또래 관계에서도 장난처럼 이야기되고 있었다. 심지어 아웃팅과 악의적인 소문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는 경험부터 결국 학교를 그만둔 이후 행복감을 찾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심각한 문제는 응답자 대다수가 이러한 혐오 표현으로 인해 정서적 피해와 학교생활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참고 견디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며 교육청의 반대와 민원을 우려해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성소수자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모른척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참고 견뎌야 하는 현실을 교육부가 묵인했고, 오히려 학교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8.4%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바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이들의 요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을 예방, 대응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있다.

"그저 혐오가 뭔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응답자들은 단순히 성소수자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교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구성원들이 성소수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 혐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에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실시해 주세요.”

“아주 깊게까지 바라지 않아요. 그저 혐오가 뭔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성소수자 혐오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평소 사용하는 혐오 표현을 학교에서 제지하고 지적(하면 좋겠어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를 외면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마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하는 현실을 이야기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가 삭제되어 '가이드북'에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교육부와 달리 성소수자 학생들은 수업 중에 반복되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을 배제하지 말아 주세요.”

“성소수자는 지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를 외면하지 마세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것을 넘어 학교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혐오 표현을 들었지만,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내버려두지 않아야 하고, 안전하게 신고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소수자 학생을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학교에 존재하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성소수자라서 학교가 두렵지 않고, 학교에 존재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혐오·차별 표현 예방 대응 가이드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부님들,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지 말자는 내용을 말한다면, 정작 님들이 우리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면 대체 사람들이 뭘 배우라는 겁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성소수자인 청소년들, 학생들의 곁에 서주십시오.”

첨부자료

1. 교사에게서 경험한 혐오 표현 피해 사례
2. 또래 친구에게서 경험한 혐오 표현 피해 사례
3. 혐오표현을 듣고 난 뒤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4. 혐오표현을 듣고 난 뒤 구체적으로 대응한 경험
5.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



[토론1] 이호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성소수자 혐오표현 실태 공동연구원/무지개행동 공동대표))

[국회 긴급토론회] 성소수자를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문제점 진단과 재검토를 위한 긴급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로 알아 본 청소년 성소수자의 혐오·차별 실태

이호림
(보건학 박사 /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



“선생님들이 그냥 되게 장난식으로, 농담 식으로 그런 욕을 많이 하세요. 트랜스일 때도 있고 게이일 때도 있고, 레즈비언은 약간 드물기는 한데...

성소수자에 대한 욕을 하면, 저도 당연히 ‘레즈비언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 하고서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되게 존경했던 선생님인데 그런 식으로 혐오 발언을 해서 뭔가 심리적으로 좀 멀어진단다. (...)

여자의 성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는 하리수 이런 사람은 여자로 안 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하하하” 웃고.

또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은 자신이 퀴어 퍼레이드를 한 번 본 적 있는데 “되게 문란하고 너희는 그런 거를 절대 접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반에서 제가 퀴어인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FGI 참여자 28, 19세, 동성애자 여성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 실태조사

- 조사 내용:
 - 성소수자 정체성과 커밍아웃, 의료적 조치(트랜스젠더), 차별 경험(일상 생활, 교육 영역, 서비스 이용), 괴롭힘과 폭력 경험, 법제도적 욕구 등
- 조사 방법:
 - 2025년 7월 8일 ~ 21일 (2주간) 온라인 설문
 -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실태의 구체적인 맥락과 당사자의 경험 확인 (청소년 3개 그룹)
- 조사 대상: 청소년 (n=457)
 - 최근 5년 내 한국에서 거주한 만 16세~18세(2007년~2009년생) 성소수자
 -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한 1,371명 중 중도 탈락자, 연구참여자 기준에 맞지 않는 자,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분석 대상 457명

※ 본 조사는 숙명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

인구사회학적 분포

청소년 응답자 (n=455)

구분		단위: 명 (%)
연령	16세	91 (19.9)
	17세	156 (34.1)
	18세	210 (46.0)
출생 시 지정 성별	남성	111 (24.3)
	여성	346 (75.7)
거주지역	서울	133 (29.1)
	경기·인천	164 (35.9)
	그 외 지역	160 (35.0)

		성적지향					
		전체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이성애	기타
성 별 정 체 성	전체	455 (100.0)	132 (29.0)	242 (53.2)	60 (13.2)	7 (1.5)	14 (3.1)
	시스젠더 남성	69 (15.2)	38 (8.4)	27 (5.9)	3 (0.7)	0 (0.0)	1 (0.2)
	시스젠더 여성	216 (47.5)	71 (15.6)	115 (25.3)	23 (5.1)	0 (0.0)	7 (1.5)
	트랜스젠더 남성	40 (8.8)	8 (1.8)	25 (5.5)	5 (1.1)	1 (0.2)	1 (0.2)
	트랜스젠더 여성	26 (5.7)	7 (1.5)	14 (3.1)	0 (0.0)	5 (1.1)	0 (0.0)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남성	14 (3.1)	2 (0.4)	9 (2.0)	2 (0.4)	0 (0.0)	1 (0.2)
성 별 정 체 성	논바이너리 지정성별 여성	90 (19.8)	6 (1.3)	52 (11.4)	27 (5.9)	1 (0.2)	4 (0.9)

매체를 통한 혐오표현 경험 (지난 12개월)

(중복응답가능)	전체 (n=454)	자정성별 남성 (n=109)	자정성별 여성 (n=345)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407 (89.6)	79 (72.5)	328 (95.1)
유튜브,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	384 (84.6)	72 (66.1)	312 (90.4)
온라인기사등의 댓글	321 (70.7)	59 (54.1)	262 (75.9)
뉴스, 인터넷기사등 언론	303 (66.7)	61 (56.0)	242 (70.1)
예능, 교양 등 방송 프로그램	149 (32.8)	20 (18.3)	129 (37.4)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131 (28.9)	18 (16.5)	113 (32.8)
게임	97 (21.4)	18 (16.5)	79 (22.9)
광고	90 (19.8)	14 (12.8)	76 (22.0)
가타매체(직접 입력)	15 (3.3)	3 (2.8)	12 (3.5)
경험한적없음	20 (4.4)	18 (16.5)	2 (0.6)

-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9명 이상(95.6%)**이 지난 12개월간 매체에서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접함
- SNS(89.6%)와 동영상 플랫폼(84.6%)을 통한 성소수자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빈번함

5

차별 경험 (지난 12개월)

(중복응답가능)	전체 (n=455)	자정성별 남성 (n=109)	자정성별 여성 (n=346)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차별 경험 있음	99 (21.8)	25 (22.9)	74 (21.4)
차별 경험 없음	356 (78.2)	84 (77.1)	272 (78.6)
(중복응답가능)	전체 (n=95)	자정성별 남성 (n=25)	자정성별 여성 (n=70)
	응답자수 (%)	응답자수 (%)	응답자수 (%)
학교에서	74 (77.9)	24 (96.0)	50 (71.4)
학원에서	28 (29.5)	6 (24.0)	22 (31.4)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24 (25.3)	12 (48.0)	12 (17.1)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9 (9.5)	3 (12.0)	6 (8.6)
의료기관에서	9 (9.5)	1 (4.0)	8 (11.4)
상담기관에서	7 (7.4)	1 (4.0)	6 (8.6)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7 (7.4)	1 (4.0)	6 (8.6)
카페, 식당 등에서	7 (7.4)	2 (8.0)	5 (7.1)
상점에서	5 (5.3)	1 (4.0)	4 (5.7)
기타	15 (15.8)	1 (4.0)	14 (20.0)

-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2명 이상(21.8%)**이 지난 12개월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음
-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77.9%가 차별을 경험한 장소로 학교를 지목함**
- 주관식 응답: 아우팅, 또래관계의 괴롭힘,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응답이 다수, '이성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교복을 안 입었을 때와 같은 징계를 받음', '수련회 참가 배제', '법적 성별에 맞는 화장실 사용 강요' 등의 응답도 존재

6

학교생활에서 시설, 제도와 관련된 어려움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a (n=445)	지정성별 남성 ^b (n=108)	지정성별 여성 ^c (n=337)
성별에 따른 교복, 반 번호, 줄서기, 체육활동 등을 구별하는 것	145 (32.6)	26 (24.1)	119 (35.3)
각종 신청서나 OMR 카드 답안지 등에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성별 기입	109 (24.5)	27 (25.0)	82 (24.3)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화장실 이용	92 (20.7)	20 (18.5)	72 (21.4)
여중, 여고 또는 남중, 남고인 점	52 (11.7)	15 (13.9)	37 (11.0)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 부재	50 (11.2)	18 (16.7)	32 (9.5)
학교의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성소수자 배제적 분위기	46 (10.3)	7 (6.5)	39 (11.6)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기숙사 이용 및 합숙	25 (5.6)	3 (2.8)	22 (6.5)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동아리 및 모임의 금지	22 (4.9)	6 (5.6)	16 (4.7)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된 징계 및 처벌 규칙	19 (4.3)	6 (5.6)	13 (3.9)
기타	22 (4.9)	5 (4.6)	17 (5.0)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힘든 점 없음	187 (42.0)	53 (49.1)	134 (39.8)

Note. a. 무응답 10명, b. 무응답 1명, c. 무응답 9명

7

교사로부터의 괴롭힘 경험

청소년 응답자, 해당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a ,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아래와 같은 경험이 하나라도 있음	142 (31.2)	53 (48.6)	89 (25.7)
겉으로 보이는 성별에 맞게끔 말하거나 행동하라고 강요하였다	113 (24.8)	41 (37.6)	72 (20.8)
내가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표현하거나 언급하면 자제시켰다	64 (14.1)	21 (19.3)	43 (12.4)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내 정체성을 알렸다	41 (9.0)	27 (24.8)	14 (4.0)
내 성소수자 정체성을 끈질기게 묻고 알아내려고 하였다	29 (6.4)	18 (16.5)	11 (3.2)
다른 사람에게 내 성소수자 정체성을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6 (5.7)	22 (20.2)	4 (1.2)
내가 성소수자임을 알고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줬다	12 (2.6)	5 (4.6)	7 (2.0)

Note. a. 각 항목에 대하여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3명 이상(31.2%)**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음
-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정체성을 알려거나(9.1%), 다른 사람에게 정체성을 알려겠다고 협박(5.7%)하는 등 청소년 성소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험을 교사로부터 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

8

교사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 경험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a (n=454)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a (n=345)
남성과 여성만을 전제로 하고 성 역할을 강화하는 식의 설명 (예: “남자는 ~해야 하고, 여자는 ~해야 한다”)	217 (47.8)	33 (30.3)	184 (53.3)
성소수자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농담	146 (32.2)	27 (24.8)	119 (34.5)
“게이(혹은 레즈비언)같다” 등의 편견에 기댄 표현	145 (31.9)	25 (22.9)	120 (34.8)
이성애를 제외한 성적지향을 반대하는 표현	142 (31.3)	22 (20.2)	120 (34.8)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것 (예 “성소수자는 정신질환자다”)로 일컫는 표현	136 (30.0)	26 (23.9)	110 (31.9)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에 기댄 표현	95 (20.9)	22 (20.2)	73 (21.2)
동성결혼·성별정정·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 관련 법·제도를 반대하는 개인적 견해를 수업 중 강조	88 (19.4)	17 (15.6)	71 (20.6)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직접적인 표현 (예: ‘동고충’, ‘호모새끼’ 등)	45 (9.9)	11 (10.1)	34 (9.9)
기타	12 (2.6)	1 (0.9)	11 (3.2)
위와 같은 경험 없음	131 (28.9)	49 (45.0)	82 (23.8)

-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 이상(71.1%)**이 교사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음

9

교사로부터 괴롭힘 및 혐오표현을 참거나 묵인한 이유

-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90.8%**가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참거나 묵인했다고 응답**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청소년 응답자 (n=286),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a (n=285)	지정성별 남성 (n=55)	지정성별 여성 ^a (n=230)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209 (73.3)	37 (67.3)	172 (74.8)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179 (62.8)	30 (54.5)	149 (64.8)
사람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179 (62.8)	26 (47.3)	153 (66.5)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170 (59.6)	25 (45.5)	145 (63.0)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134 (47.0)	24 (43.6)	110 (47.8)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115 (40.4)	21 (38.2)	94 (40.9)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서	113 (39.6)	17 (30.9)	96 (41.7)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지 못해서	67 (23.5)	12 (21.8)	55 (23.9)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50 (17.5)	11 (20.0)	38 (16.5)
대응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43 (15.1)	12 (21.8)	31 (13.5)

Note. a. 무응답 1명

-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교사로부터의 괴롭힘이나 혐오표현을 참거나 묵인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5.1%에 불과함**
- 가장 높은 응답은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73.3%)였으며,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62.8%), 사건이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62.8%)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라는 응답도 (59.6%) 과반 이상이었음

10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 경험

청소년 응답자, 해당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a ,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아래와 같은 경험이 하나라도 있음	275 (60.4)	86 (78.9)	189 (54.6)
다른 사람에게 동의 없이 내 정체성을 알렸다	139 (30.6)	46 (42.2)	93 (25.9)
내 성소수자 정체성을 끈질기게 묻고 알아내려고 하였다	135 (29.7)	39 (35.8)	96 (27.8)
외모, 옷차림, 행동이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지 않다고 조롱했다	133 (29.2)	60 (55.1)	73 (21.1)
내가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표현하거나 언급하면 자제시켰다	107 (23.5)	28 (25.7)	79 (22.8)
겉으로 보이는 성별에 맞게끔 말하거나 행동하라고 강요하였다	106 (23.3)	50 (45.9)	56 (16.2)
내 성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	66 (14.5)	33 (30.3)	33 (9.5)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리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했다	65 (14.3)	32 (29.4)	33 (9.5)
다른 사람에게 내 성소수자 정체성을 말하겠다고 협박하였다	62 (13.6)	33 (30.3)	29 (8.4)
온라인에서 성소수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52 (11.4)	33 (30.3)	19 (5.5)
아웃팅하겠다고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협박했다	40 (8.8)	29 (26.6)	11 (3.2)
나의 SNS(트위터/X, 인스타그램 등)를 찾아내어 아우팅 협박을 했다	38 (8.4)	28 (25.7)	10 (2.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나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뺏아갔다	24 (5.3)	21 (19.3)	3 (0.9)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예: 폭행, 감금 등)을 가했다	23 (5.1)	20 (18.4)	3 (0.9)
아우팅 협박을 하며 부당한 요구(예: 금전 요구, 성적인 요구 등)를 했다	23 (5.1)	20 (18.4)	3 (0.9)

Note. a. 각 항목에 대하여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자주 있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11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 경험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a (n=454)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a (n=345)
“게이(혹은 레즈비언)같다” 등의 편견에 기댄 표현	352 (77.5)	60 (55.0)	292 (84.6)
성소수자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농담	301 (66.3)	58 (53.2)	243 (70.4)
특정 성소수자 집단(예: 트랜스젠더, 게이 등)에 대한 혐오적 발언	300 (66.1)	58 (53.2)	242 (70.1)
이성애를 제외한 성적지향을 반대하는 표현	254 (55.9)	46 (42.2)	208 (60.3)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것 (예 “성소수자는 정신질환자다”)로 일컫는 표현	237 (52.2)	46 (42.2)	191 (55.4)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직접적인 표현 (예: ‘동고충’, ‘호모새끼’ 등)	229 (50.4)	43 (39.4)	186 (53.9)
성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발언	229 (50.4)	46 (42.2)	183 (53.0)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에 기댄 표현	218 (48.0)	38 (34.9)	180 (52.2)
기타	15 (3.3)	1 (0.9)	14 (4.1)
위와 같은 경험 없음	59 (13.0)	34 (31.2)	25 (7.2)

Note. a. 무응답 1명

-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60.4%)**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음
- 혐오 표현은 더욱 빈번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8명 이상(87.0%)**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12

또래 학생으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 경험

“제 게이 친구 중에 오픈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개랑 복도를 지나가면 뒤에서 더럽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어깨를 부딪쳐, 일부러 부딪히고 지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개가 없는 곳에서, 반 애들 있는 모둠에서 “몇 반 키 큰 개가 게이라더라, 더럽다, 남자애가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개도 저한테 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상담을. 남자애들이 내가 없는 데서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다닌다, 다른 학교까지 가서 재가 더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봤었고 들었어요.”

FGI 참여자 21, 19세, 범성애자 여성

“저희 학교 남학생들은 성소수자 혐오, 여성혐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선생님이 관련 서적으로 수업을 하실 때, 쉬는시간에 트젠ㅋㅋ 게이ㅋㅋ 라며 조롱하는 의미로 욕설로 사용하며, 교실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활동 닉네임도 성소수자 혐오 의미가 담긴 것들이 많습니다. 과목 선생님은 그것이 혐오성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지 묵인하는 건지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주관식 응답 중

13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 및 혐오표현을 참거나 묵인한 이유

-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의 79.4%가 참거나 묵인했다고 응답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청소년 응답자 (n=309),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a (n=308)	지정성별 남성 (n=57)	지정성별 여성 ^a (n=251)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221 (71.8)	39 (68.4)	182 (72.5)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221 (71.8)	40 (70.2)	181 (72.1)
사람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190 (61.7)	29 (50.9)	161 (64.1)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182 (59.1)	26 (45.6)	156 (62.2)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140 (45.5)	21 (36.8)	119 (47.4)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138 (44.8)	25 (43.9)	113 (45.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서	119 (38.6)	15 (26.3)	104 (41.4)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99 (32.1)	19 (33.3)	80 (31.9)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알지 못해서	73 (23.7)	9 (15.8)	64 (25.5)
기타	5 (1.6)	0 (0.0)	5 (2.0)
대응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9 (12.7)	9 (15.8)	30 (12.0)

Note. a. 무응답 1명

-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괴롭힘이나 혐오표현을 참거나 묵인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7%에 불과함
- 가장 높은 응답은 학교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71.8%)과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71.8%)였음

14

학교 내 괴롭힘 및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교사의 괴롭힘 및
편견에 기댄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ab}

9.2%



대응을 통해 상황이
개선됨^c

3.4%

또래 친구의 괴롭힘 및
편견에 기댄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함^{ad}

20.6%



대응을 통해 상황이
개선됨^e

8.8%

Note.

a. 직접 항의, 위클래스 상담, 외부 도움 요청 등

b.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댄 표현을 경험해본 응답자 (n=323)

c. 교사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댄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n=29)

d.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댄 표현을 경험해본 응답자 (n= 389)

e. 또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편견에 기댄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n=80)

15

상담 교사와 성소수자 관련 상담 경험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이야기한 적 없음	407 (89.5)	91 (83.5)	316 (91.3)
이야기한 적 없는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n=407)	지정성별 남성 (n=91)	지정성별 여성 (n=316)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 같아서	225 (55.3)	32 (35.2)	193 (61.1)
담임교사, 부모 등에게 아우팅할 것 같아서	215 (52.8)	35 (38.5)	180 (57.0)
성소수자라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소문날까 봐	202 (49.6)	55 (60.4)	147 (46.5)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할 것 같아서	186 (45.7)	29 (31.9)	157 (49.7)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이 없어서	115 (28.3)	12 (13.2)	103 (32.6)
다른 곳에서 이미 상담을 받고 있어서	21 (5.2)	6 (6.6)	15 (4.7)
기타	28 (6.9)	6 (6.6)	22 (7.0)

- 청소년 성소수자 **10명 중 약 9명 (89.5%)**는 학교 상담 교사와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한 상담을 한 적이 없음
-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한 고민이 없거나(28.3%), 다른 곳에서 이미 상담을 받고 있어서 (5.2%) 관련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3.5%였으며, **나머지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관련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상담 교사와의 성소수자 관련 상담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불신 때문이었음**
- 상담 교사의 성소수자 관련 지식에 대한 불신(55.3%), 담임교사나 부모(52.8%) 또는 또래 학생(49.6%)에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상담 교사가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할 수 있다는 불신(45.7%) 등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었음

16

청소년·중등교육 영역

학교 내 상담의 한계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약간 그런 쿼어 쪽에 그런 걸 약간 이해해 주시고 좀 그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약간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마음 놓고 고민을 막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FGI 참여자 18, 17세, 범성애자 논바이너리

“사실 위클래스에 가도 선생님 자체가 이제 쿼어에 대해서 잘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당연히 일반 선생님들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거를 상담을 받거나 그런 선생님은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FGI 참여자 19, 19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남성

17

탈학교 경험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7.4%가 탈학교 경험이 있고,
탈학교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75.9%는 은둔 상태를 경험함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응답자 n=79

집에만 있었던 경험 (은둔 상태)	전체 (n=79) 응답자수 (%)	지정성별 남성 (n=11) 응답자수 (%)	지정성별 여성 (n=68) 응답자수 (%)
경험있음	60 (75.9)	8 (72.7)	52 (76.5)
경험없음	19 (24.1)	3 (27.3)	16 (23.5)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n=455)	지정성별 남성 (n=109)	지정성별 여성 (n=346)
탈학교 경험 있음	79 (17.4)	11 (10.1)	68 (19.7)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 중복응답 가능, 단위: 명 (%)	전체 (n=79)	지정성별 남성 (n=11)	지정성별 여성 (n=68)
정신적·신체적 건강상의 이유로	56 (70.9)	8 (72.7)	48 (70.6)
기존 학교 교육 방식이 맞지 않아서	45 (57.0)	5 (45.5)	40 (58.8)
학교가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이 아니어서 (화장실 등 시설 이용의 어려움, 성소수자 혐오적인 분위기 등)	20 (25.3)	7 (63.6)	13 (19.1)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으로 인해	18 (22.8)	4 (36.4)	14 (20.6)
취업/아르바이트 등 진로와 관련된 이유로	12 (15.2)	2 (18.2)	10 (14.7)
성소수자임이 원치 않게 타인에게 알려져서	9 (11.4)	4 (36.4)	5 (7.4)
부모님과 갈등, 집안 경제 사정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9 (11.4)	3 (27.3)	6 (8.8)
기타 주관식 응답 작성 여부	6 (7.6)	1 (9.1)	5 (7.4)

18

정신건강

우울증상 (CES-D)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중 약 7명(69.0%)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울 증상이 나타남**

성인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a (n=2,389)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b (n=627)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c (n=765)	트랜스젠더 남성·여성 ^d (n=322)	그 외 성소수자 ^e (n=781)
우울 증상 ^a	1,095 (45.8)	185 (30.9)	280 (37.8)	198 (63.7)	432 (57.9)

청소년 응답자, 단위: 명 (%)	전체 ^a (n=439)	지정성별 남성 ^b (n=104)	지정성별 여성 ^c (n=335)
우울 증상 ^a	303 (69.0)	65 (62.5)	238 (71.0)

Note. a. CES-D 20개 문항(0~3점) 합계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b. 무응답 106명 c. 무응답 28명 d. 무응답 32명 e. 무응답 11명 f. 무응답 35명, g. 무응답 16명, h. 무응답 5명, i. 무응답 11명

19

요약

본 조사에 참여한 만 16-18세 한국 청소년 성소수자 455명은

- 95.6%가 지난 12개월 동안 매체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으며, 혐오표현을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매체는 SNS(89.6%)와 동영상 플랫폼(84.6%)이었음
- 21.8%가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차별 경험이 발생한 주된 장소는 학교(77.9%)였음
- 71.1%가 교사로부터,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음
- 68.8%가 교사로부터, 39.6%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음
- 교사나(9.2%)나 또래 학생(20.6%)으로부터의 괴롭힘 및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이는 대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대응 과정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의 노출에 대한 우려나 대응을 통한 상황 개선에 대한 불신 때문임. 실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응답도 저조하였음 (교사 3.4%, 또래 학생 8.8%)
-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중 17.4%가 탈학교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75.9%는 은둔 상태를 경험하였음
-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10명 중 약 7명(69.0%)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울 증상이 나타남

[토론 2]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성소수자 삭제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배재고 사태는 막을 수 있나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난 8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채,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던 교육부의 변명 중 하나는 소위 ‘배재고 사태’라 불리는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에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성소수자와 관련된 언급 자체에 부담을 느껴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삭제한 것이야 말로 명백한 차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교육부의 접근 방식이 배재고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보탬이 되는 것이 맞는지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혐오·차별에 대응하겠다고 사회적 소수자를 공론장에서 삭제시키는 모습과 5·18이라는 민주주의 역사의 사건을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해온 역사가 꼭 닮아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5·18을 어떤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 왔는가

한국 사회에서 5·18을 조롱하는 현상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 않았다. 1980년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움직임 속에서 광주에서도 5·18을 기점으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흐름에 함께하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써내려 갔다. 이후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싸워왔고, 그 힘은 1987년 6월 항쟁과 더불어 군부 독재의 종식과 직선제 개헌이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 성과로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가 열리고,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국가가 나서서 5·18의 의미를 인정하고 국가폭력에 대해 반성하는 사회적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했다. 그들이 어떤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국가의 관심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5·18을 그저 광주라는 지역 대한 ‘보상’의 문제로 만들며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과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킨 것이다.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지역감정 해소였지만 정작 이런 거래가 5·18을 전국에서 벌어진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흐름과 연결짓지 못하고 그저 광주 지역에 관한 특혜를 주는 문제처럼 여겨지도록 씨앗을 심어둔 것이다. 국가의 이 터무니 없는 거래 이후 오랜 기간 5·18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조사 보고서조차 발행되지 않았다. 그 사이 전두환이 주장했던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음모론이 퍼지고 이를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도 등장했다. 2019년 정부는 뒤늦게 ‘5·18 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4년 종합보고서를 냈지만,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 거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5·18에 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에

는 국가의 책임이 있었다.

문제는 이 불충분한 사회적 기억의 틈을 파고드는 극우 세력이다. 5·18을 민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싸웠던 시민들을 역사적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그저 피해자 아니면 빨갱이로 위치 짓는 주장에 단호하지 않았던 국가의 태도를 극우가 파고든 것이다. 극우는 5·18을 민주주의로부터 떼어내기를 시도하며 민주주의 자체의 역사적 정당성을 흔들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세력을 조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역사로서 흔들리고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5·18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답을 찾는 일이다. 음모론과 조롱으로 무너진 공론장을 다시 열고 극우에 대항하는 언어와 사회적 조건을 형성해나가는 일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책임을 지닌 정치권이 5·18을 조롱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어찌 감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정치는 분노에 앞서 이미 우리가 눈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5·18을 향한 조롱과 혐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답해야하는 한라는 것이다. 스타벅스를 향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다른 차원이다. 스타벅스 사태나 배재고 사태 이전부터 이미 한국 사회에서 5·18은 민주주의 역사의 기점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기억으로 남길 것인지에 관하여 정권 마다 다른 태도를 보였고, 그 사이 이를 조롱하는 것이 놀이가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조차 공론장의 경합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전달 할 뿐 민주주의의 역사를 어떻게 써내려가겠다는 고민과 공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스타벅스 사태 이후에 대통령이 분노하고 민주당에서는 5·18 조롱 처벌법 발의까지 나서며 엄정 대처를 내세웠지만, 결국 배재고 사태에서 보듯 청소년이 5·18을 희화화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는 공론장을 열고 제대로 된 사회적 기억을 만들어 가겠다는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 지금 혐오와 조롱을 대응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되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 표현만 가릴 수는 없다

5·18 역사 왜곡과 조롱을 공론의 장에서 다루지 않는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가 있다. 바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처하는 국가의 태도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물론 학교 현장의 교사, 광장의 시민들은 끊임없이 문제제기 해왔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제정 하겠다면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하고, 학교성교육표준안에

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한 주체도 국가였다. 공론장을 열어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원칙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답을 찾아가야 하는 국가의 역할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는, 합의가 되지 않은 문제이니 다루지 않겠다며,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마저도 무너뜨려온 것이다. 이는 5·18을 어떠한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스스로 무너뜨려온 모습과 다르지 않다.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린 자리에서 보수 개신교 조직들이 세력화의 계기를 만들고 극우화로 나아가는 경로로 삼도록 방치했다는 점까지도 말이다. 그저 민주주의의 역사의 기점으로서 5·18에 대한 의미를 정립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표현만 규제하겠다는 방식과 성소수자와 성평등에 대해선 언급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삭제하고 들어냄으로서 문제를 외면하는 방식이었을 뿐이다. 차별과 혐오는 일상의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무엇을 문제로 지목하고 반차별의 지향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리려는 일관성 없는 대처를 반복하고 있는 꼴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은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국가의 태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청소년들의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일방적 진단과 함께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이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교육은 분명 이루어져야하지만, 그에 앞서 어떤 실패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되는 것이 먼저다. 정작 지금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키워온 국가의 역할을 달리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대응할 수 없다.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외면하고, 학생 인권조례는 무너져왔다. 역사부정과 음모론을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활용해온 정치가 5·18에 관한 사회적 기억을 무산시켜왔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혐오와 차별을 놀이처럼 사용한다고 이들만 탓할 수 있을까.

이제는 배재고 사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국가가 만든 결과라는 통렬한 반성 속에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 극우가 지난 10여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너뜨린 민주주의와 평등에 관한 사회적 원칙과 기억을 복구하고, 비차별과 평등의 지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론장 말이다. 공론장을 여는 경로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놓여있다. 지금까지 애써 모른척하며 차별에 관한 아무런 원칙이나 규정 없이 혐오 ‘표현’만 금지하겠다는 구상은 불가능하다. 정부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또 다시 혐오를 빙자한 민원을 핑계대며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무산시켜선 안된다. 제대로 된 가이드북 내놓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를 열고 함께 대응해나갈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방법은 사회적 원칙을 세우고, 이에 관하여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토론 3] 윤아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초등 교실에서 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의 필요성

윤아름(서울세검정초등학교 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성평등특별위원장)

초등 교실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실천하면서 겪은 현장의 경험과 최근 전교조에
서 진행한 ‘교육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성소수자 항목 삭제에 대한 현장
교사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항목이 삭제된 것이 현장에
어떤 위기를 방치하는지,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가이드북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스승의 날 제자들에게 받은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1년 이후로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사라지고, 다른 선생님들에게는
배울 수 없는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었어요. 아직도 저희 반에 있던 무지
개 깃발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책 읽어줄 때 사람의 생김새나 성격 등이 많이 달라도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 주변에 친구들 중 차별을 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
구들에게 예전 같았다면 숨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건 차
별이야.’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10가지 이상을 배운 것 같아요.”

편견과 차별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혐오·차별 대응 교육의 본질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한 학년 동안 교
실에서 삶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해가 지나도 제자가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사실은 교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에는 성소수자 인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은 교육과
정의 단어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주제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학습 목표에 가족, 인권, 다양성 등이 나올 때 성소수자 가족을 언급하고, 독서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급 문고에 꽂아둔 성소수자 친화적인 어린이책을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어린이들 사이의 대화를 귀기울여 듣다가 성소수자 관련 이야기가 나오
면 그 말을 화두로 삼아 대화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대화에서 성소수자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 기회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학급 자치 활동으로 ‘다 좋은 날’ 행사도 엮입니다. 개성 있는 나만의 옷차림으로 등교

하고 친구의 다양한 모습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날입니다. 어린이들은 여행지에서 산 특별한 옷, 좋아하는 캐릭터 옷,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린 옷들을 입고 옵니다. 물론 평소에 입던 대로 입어도 괜찮습니다. ‘다 좋은 날’이니깐요. 다양성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만들어 손에 들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교실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며 축하합니다.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실 안의 즐거움과 기쁨 뒤에는 늘 현실의 한계와 슬픔이 뒤따릅니다. ‘다 좋은 날’에 아프다며 결석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린이에게 왜 학교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아팠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부모님이 교실에 걸린 무지개 깃발은 사탄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눅든 목소리로 의기소침하게 말하는 어린이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교실에서 성평등 어린이책을 어린이와 함께 읽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 보호자님은 저에게 전화로 가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반대하니 학교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교육청의 ‘양성평등교육계획’을 근거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학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교육청 공문이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공식 문서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 활동에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 교육감 후보의 혐오 선동 현수막이 저희 학교 앞에도 걸렸습니다. 작년 제자가 저를 찾아와 “선생님 정자 앞에 있는 현수막 봤어요.”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린이는 현수막에 대해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고 교사에게 채워진 정치적 중립이라는 족쇄 때문에 저는 선뜻 자신있게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대응 안내서』 초안에는 차별과 혐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평등과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이드북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 검토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 실천 사례와 LGBTQ+그림책을 소개하는 교사 연수를 진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민원은 없었나요?” 많은 교사들이 혐오 발언을 목격하고 성소수자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반퀴어 단체의 민원 공격이 두려워 선뜻 교육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인권 교육을 실천한 동료 교사들은 퀴어퍼레이드에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업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사이버 불링, 학교 앞 피켓 시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조직적 민원 전화에 장기간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혐오성 조직적 민원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전교조가 발표한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교사 1109명 참여)⁹⁾에서 교사들의 69.9%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문제 삼을까 우려된다”, 60.1%

가 "학부모 민원이나 외부 공격이 우려된다"며 혐오·역사왜곡 관련 사안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고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민원 핑계 뒤에 숨지 않길 바랍니다.

2017년 청와대가 도입한 국민청원제도의 교육분야 1호 안건은 21만명 이상이 동의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였습니다.¹⁰⁾ 당시 많은 페미니스트 교사와 시민들은 학교에 들어와있는 여성 및 소수자 혐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오랜 기간 묵묵부답으로 방기하다가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통해 마치 그동안 없던 혐오가 갑자기 일어난 듯 충격이라는 반응을 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학교 안 혐오에 대응할 기회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평등과 인권을 요구하는 우리의 민원은 왜 계속 외면당하는 것입니까?

2020년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¹¹⁾ 때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착하고 있던 성평등 도서 사업이 반퀴어 단체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국회의원 한 마디에 바로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성평등, 다양성 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 때 회수된 책은 저희 교실에 와 있고, 어린이들이 다른 학교 도서관 스티커가 있는 책이 왜 우리 교실에 있는지 묻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효능감을 얻은 반퀴어 단체들은 전국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대대적인 금서 요구 민원을 넣었고 충청남도과 경기도교육청의 관내 도서관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열람 제한 및 폐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금서 조치가 철회되었는데 이제는 교육부가 시 교육청이 만든 인권교육 자료를 검열하고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2의 금서 사태가 되지 않도록 당장 내용을 복원해야 합니다.

저는 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3년 전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전국 조직을 둔 성경적 성교육 단체 강사가 학교 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¹²⁾ 수업 시간 내내 강사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쓰고 교육청 성평등팀에 재교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을 때, 학교 측은 "성교육에는 문제가 없으며 재교육 요구는 학교의 자율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학교에서 인권 교육을 할 때는 보호받지 못했던 '교육 자율권'이 성차별적 교육에는 무척이나 강하게 적용된

9)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담회 보도자료」, 전교조, 2026. 7. 7.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45042&sfl=wr_subject&stx=%ED%98%90%EC%98%A4&sop=and&menu_id=2010

10) 「21만명 동의한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어떻게 답할까」, 경향신문, 2018. 2. 7.
<https://www.khan.co.kr/article/201802060040001>

11) 「성교육 책 논란되자 회수한 여가부...여성단체 "존재 이유 망각"」, KBS뉴스, 2020. 8. 3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529002>

12) 「성차별적 성교육에 민원을 넣자, 소장을 받았다」, 백소운, 교육공동체 벗, 2025. 8. 13.
<https://communebut.com/Article/?bmode=view&idx=167304260>

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근거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차별적 상황은 사실 학교와 당국이 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목도했습니다. 이후 그 성교육 강사는 저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했고, 저와 제 아이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만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교사와 강사들 역시 혐오·차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성소수자위원회가 최근 긴급 실시한 ‘교육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성소수자 항목 삭제에 대한 현장 교사 인식’ 설문조사(교사 302명 참여)¹³⁾ 결과, 교사의 62.6%가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혐오·차별 표현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63.6%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부재와 민원 부담으로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가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항목을 일괄 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6.7%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을 성소수자라 밝힌 당사자 교사(24.5%)의 경우 94.6%가 혐오 표현을 직접 접하고 87.8%가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해, 성소수자 당사자 교사들이 체감하는 강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가이드북의 성소수자 항목 복원과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동료 교사의 혐오 발언에 지침이 없어 아무 말도 못 했다는 한 성소수자 교사는 "제발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교사는 "이 사태 이후 매일이 지옥 같다. 성소수자 교사는 교사가 아니고, 성소수자 혐오는 혐오가 아니냐"라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비성소수자 교사들 또한 "성소수자 관련 내용 삭제는 성소수자 학생들을 방치하겠다는 의미"라며, 교육부가 혐오에 굴복하는 대신 삭제된 항목을 즉각 복원하고 교사를 지키는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과 혐오·차별 대응을 언제까지나 교사 개인의 의지와 희생에 맡겨둘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가 포함된 가이드 라인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은 물론, 나아가 혐오·차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명시하여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들은 학생에게 "그건 차별이에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용기를 가르치는 교사와 성소수자 학생, 교직원, 양육자가 차별과 혐오 앞에 외롭고 위험하게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13) 「교육부 <학교 내 차별·혐오 표현 대응 안내서> ‘성소수자’ 항목 삭제에 대한 현장 교사 인식조사 결과 보고」, 전교조, 2026. 9. 9.

[토론 4]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교육을 바꾸자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이번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사태를 보며, 교육부는 어쩌면 이렇게 교육을 잘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잘 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혐오·차별이 문제라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사회, 혐오·차별이 일어날 때 가만있지 않고 함께 맞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혐오에 대응하고 반차별을 이야기하는 교육도 가능하다. 그 출발점은 정부의 정책이고 법령일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응 가이드북을 만들면서부터 혐오에 굴복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의 문제’라는 잘못된 관점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극단적인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사적 감정의 문제,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아닌 것이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삶을 ‘정상’이라고 정하고,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집단화하여 낙인찍고, ‘이상하고 부족하다, 잘못되었다,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그만큼 지금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에 심각한 문제이고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민원이 우려되니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빼겠다는 것은 혐오·차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차별을 표출하는 민원을 내버려 두겠다는 말이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된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셈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렇게 정부가 먼저 혐오와 차별에 굴복한다면, 학교든 개인이든 이에 맞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부터 무엇이 혐오·차별인지, 그것이 왜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만들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나 가이드북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그렇게 어떤 혐오·차별은 해도 된다는 태도가, 지금 학교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혐오·차별이 만연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식의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발언도 종종 접하곤 한다. 물론 지금 혐오·차별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일베’ 같은 특정 사이트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청소년 혹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차별, 약자들은 이런 취급 받아도 된다고 믿으며 이뤄지는 혐오가, 이미 공기처럼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 역사의식이 문제, 이런 식으로 보면서 무슨 무슨 교육을 해서 바로잡자고 생각하는 한 문제는 바뀔 수 없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지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혐오와 차별에 함께 맞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이 그 시작이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외치는 이유이다.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부의 미룰 수 없는 책무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을 권리, 폭력 등을 당했을 때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도 학생인권이다. 교육과정에서 혐오·차별의 문제점과 대처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과 삶을 경험할 권리 역시 학생들의 교육권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차별 없이 이 협약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은 물론, 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대한 존중의 증진,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따라 살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각종 혐오·차별을 방치하고 때로는 부추기기까지 하는 한국의 학교와 교육부는 학생들의 중대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변명 중에 2022 교육과정에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애초에 그것부터 교육부의 인권 침해이고 차별이다. 왜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포함하지 않았는가? 국가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왜 다양한 청소년들의 권리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나? 교육과정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정하여 성소수자 등 여러 소수자의 인권을 포함하고 혐오·차별에 대한 대처를 중요한 교육 테마로 삼아야 한다. 이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기에 더욱 그 문제를 교육과정에서 접하고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혐오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려는 움직임도 꾸준히 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에 대해 문제제기한 일들, 성차별적인 학교생활규정을 바꾸려는 활동들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교육청은 그때도 이런 사건들을 일부 가해자의 성비위 문제라거나 특정 학교만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축소해서 바라봤고, 무엇이 문제이고 그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고 바뀌어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등에서 제정되었을 때도,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을 내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자리잡는 것을 방해했던 것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학력 차별은 합리적이라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들어가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적도 있다.

결국 학교에서의 혐오·차별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고 여기까지 왔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늦었기에 더욱 제대로 해야 한다. 교육부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의 사유를 포함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혐오 표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법, 그리고 모든 지역에 학생인권조례부터 만들어야 한다. 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기도 한 차별금지법에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혐오·차별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부부터 반차별 원칙과 인권에 대해, 그리고 청소년들의 삶과 목소리를 공부하라.